

# 주변 4강과 21C 한반도의 생존·발전 전략

송희연 /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대학장

**6** · 15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되고 있다. 우선 상호 비방이 중지되고, 첫 이산가족 상봉이 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금강산의 특별경제지구 지정을 합의하고, 서해안 공단 부지를 개성에 확정·합의하였으며, 비전향 장기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송환되었다.

2차 장관급회담에서는 연내 이산가족 상봉을 두 차례 추가로 실시하고, 경협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 보장 및 이중 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동시에 문산~개성간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9월중에 실무 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한라산과 백두산의 교차 관광도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 중국·러시아·일본과는 물론 미국과 구라파 등 전방위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 기구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

다만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에 관하여는 이번 2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쌍방 군사 당국자들이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갖도

록 협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군사적 긴장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조치가 아직은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 조치야말로 남북 관계 개선과 경협에 있어서 조속히 풀어야 할 사안이다.

본 고에서는 우선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고 미·중 관계와 남북 관계를 조명한 후, 21세기 우리 한반도의 생존 전략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 남북정상회담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

6·15 남북정상회담은 그 동안 한반도 문제를 북한과 미국이 논의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부터 당사자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대하여는 주변국들의 첨예한 이해 관계가 없을 수 없다. 중국의 경우 남북한 모두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바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그 동안 남북 관계에서 소외되었던 러시아는 그들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방문하였다. 미국은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MD) 문제 해결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주한 미군 문제에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일본 역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경제 협력 촉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을 보는 시각은 만만치가 않다. 즉, 북한의 진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을 해결하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 및 확산 포기를 목표로 하고있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를 약화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이용했다고 보는 견해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북한이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이고 '전술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하건, 진정한 구조적 변화를 원하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건 간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진정한 '전략적' 변화로 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지나친 기대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안보 환경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원

만한 경험의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북한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 관심사는 일차적으로 안보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유화 공세와 한국 내부의 반미주의 정서 그리고 장차 있을지도 모를 주한 미군 철수론에 대하여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은 남북 관계의 개선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의 균형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선택

중국의 등장은 더 이상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래 지난 20년 동안 약 13억의 대규모 인구를 가지고 미국·구소련의 적극적인 방해와 견제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10%의 고도 성장을 이룩했다. 구매력 환산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은 이미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중국의 자체 예측(중국인 항상 보수적인 예측을 함)에 따르면 2020년경이면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돋보인다. 국제연합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G8+1이라는 위상을 점유하고 있다.

더욱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등장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개선에도 중국은 직접적인 관여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중국은 한국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1979년 한·중간의 간접 교역 규모는 2,000만 달러 정도였으나, 18년 후인 1997년에는 한·중 교역 규모가 237억 달러로 1,000 배 이상 증가되었다. 1991년 한·중 수교 직전에도 한·중 교역 규모는 60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

정치·경제 면에 있어서도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은 한반도와 특별한 관계이다. 최근 중국은 4자회담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북한의 경제 위기 극복에도 중국의 식량 및 에너지 원조가 크게 기여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하여 미국과 같이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경쟁하는 가운데 제3자적인 위치에 있는 미·중과 일·러가 과연 자기들의 이익 추구 없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무조건 지지할 것인가?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 러시아의 경제적 안정과 성장 기로의 돌입이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2020년경 이후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보다 커질 경우 우리의 생존

및 발전 전략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지리적으로 4강의 중심에 놓인 통일한반도가 교통·통신·물류·무역·금융·문화의 중심지로서 동북아의 균형자(balancer)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을 것인가?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4강의 침예한 이해 관계 속에 놓여있는 한반도의 생존과 발전의 장기 구상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한반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4강의 이해와 남북한의 이해가 침예하고도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탈출하려면 민족적인 생존과 발전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의 지혜를 모으고 남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1세기 한반도의 생존 및 발전 전략

지정학적으로나 경제 발전 단계로 볼 때 우리나라는 동북아 지역에서 과연 어떠한 위치에 놓여있는가? 21세기 역동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우리나라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21세기 한국 경제가 크게 신장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로 볼 때 동북아의 4강(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비해 대단히 적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다.

그러나 만일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균

형 발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저울의 작은 '추'와도 같이 그리고 지렛대의 작은 '지렛목'과도 같이 교통, 통신, 물류, 무역, 국제 금융, 첨단 지식 및 문화 상품 생산에 있어서 동북아의 교류 중심 국가로 발전한다면, 비록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주위 강대국에 비하여 작으나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는 주위 강대국에 못지 않은 핵심 국가로서, 또한 균형자(balancer)로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생존 전략인 동시에 발전 전략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교류 중심 국가로 부상하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교류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여건부터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을 경제에서는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한다. 사회간접자본은 그 특성상 수입이 거의 불가능하며 사전에 미리 투자해 놓아야만 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광의의 사회간접자본 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첫째, 윤리적·정신적인 기본 질서의 회복이라는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다. 생산성 향상의 주체는 사람이다. 사람들의 언행을 좌우하는 것은 마음이다. 온 국민이 옳은 정신을 갖고 열심히 그리고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창의적인 일에 대한 올바른 평가 기

준이 설정되고 이 기준이 지켜질 때 비로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기본 질서의 회복 없이는 활발한 수출도, 해외 직접 투자의 유치도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지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다. 기능 인력이나 고급 두뇌 인력뿐만 아니라 고도의 문학 및 예술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기술 개발 및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지식 기반 경제가 제대로 교육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과 투자 그리고 기초 과학 연구 기반 등에 착실하게 확장·안착시키는 것은 지적 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적이다. 향후 경제 성장의 성패는 첨단 지식 산업의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고급 두뇌 인력, 창의적 문화 인력의 양성에 달려있다. 다가올 21세기에는 고등학교와 대학의 경쟁력수준이 곧 그 나라의 경쟁력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셋째, 제도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이다.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제도와 관행을 우리 문화와 여건에 맞도록 개편, 정착해 나가야 한다.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낭비 요소가 존재하는가? 이번 IMF 체제를 통해 정부 개혁, 금융 개혁, 기업 개혁, 노동 개혁이 성공적으로 달성된다면 제도적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만일 이런 호기를 놓

친다면 제도적 개혁은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지식 기반 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장 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경제 제도의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되어야 한다.

넷째, 물리적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다. 수출과 산업 생산의 애로가 되고 있는 도로, 항만, 창고, 내륙 컨테이너 기지 건설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종합 화물 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도시 교통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 시설을 서둘러 확충함으로써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다섯째, 개방 경제 체제의 구축이다. 시장 개방은 통상 마찰을 완화하고 비효율적인 산업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연고주의에 입각한 동양적인 경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합병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다. 최근 영국, 미국, 독일, 호주 등 서구 선진국가들은 지난 7~8 년 동안 과감한 경제 개혁(정부, 금융, 노동 분야)을 통해 저성장과 고실업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일본만은 동양의 연고주의로 인하여 아직도 본격적인 경제 개혁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섯 가지 광의의 사회간접자본 형성을 한반도 전체에 확산시키기에

는 인력·자금·경험·문화 면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전면적인 개방·개혁이 가장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개의 특정한 지역(예컨대 제주도, 인천광역시 모든 도서-인천국제공항의 영종도와 송도신도시, 광양, 북한의 나진·선봉 등)을 지정하여 '국제 자유 도시'를 건설하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고 개혁·개방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적용한다면 21세기 지식화·정보화·세계화의 시대를 선도하고 무한 경쟁과 지역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롭고 과감한 전략적 결단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국가 경영 전략의 장기 구상과 실천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4강의 경제인들과 세계 각처의 기업인들이 가장 기업하기 편하고 살기에 쾌적한 한국의 '국제 자유 도시'에 몰려들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 자유 도시들이 세계인들의 국제 사업장이 된다면, 한반도가 동북아 지역의 균형과 안정 그리고 번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통일 한반도는 4강 어느 한쪽에도 편파적으로 가까이 할 필요가 없는 명실상부한 '균형자(balacer)'로서 자주적 국가 경영을 영위하면서 스스로의 자존을 지키며 생존하고 번영하게 될 것이다. **完**